



주간통일정세 2014-09(2014.02.24~03.02)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4-09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됐다고 비판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문헌(김정은 논문) 토의사업을 전담적으로 진행하고 학습과 강연도 하고 결의도 많이 다졌지만 실제 당안에서 현대판 종파가 발생한 것을 미연에 적발 분쇄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당 안에서 또다시 종파가 나타난 것은 우리 사상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도전하는 분파행위는 바로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적 배신자들이 가담하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당, 반혁명"이라고 비난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치는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해야 하겠다"고 말함.
- 이 자리에는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 당 비서,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조연준·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 당 제1부부장, 동영일 군 장성과 도당 책임비서들이 함께 함.

#### ● 北 연일 '사상전' 독려... "잡사상 막는 모기장 치자"(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1면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색적인 풍조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적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강조함.
- 또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적대세력들이 주민들을 '부패타락'시키기 위해 "컴퓨터와 기억기(USB 등 기억장치)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들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기입하여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함.

#### ● 北 기자동맹 확대회의.. "사상전 나팔수 될 것"(2/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회의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와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들, 평양시와 지방의 출판보도기관 책임일꾼들,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함.
- 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4일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유일영도 체계 확립을 위해 당 사상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언론이 '진군 나팔수가 되겠다면서 사상전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짐.
- 이들은 또 김 제1위원장의 연설은 "기자, 언론인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출판보도부문에 불을 지피고 언론전, 선전선동전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北 "사상전 포성으로 강산 뒤흔들자"...'사상전' 총력(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라며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절대 충성과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전을 독려함.
- 신문은 2면 '정론'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에서 "모든 승리 와 기적의 첫 자리에 바로 사상중시, 사상선행의 원칙이 있다"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고 신념"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2/25, 김정은 黨 제1비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일 회의 및 폐막식(최태복 폐회사) 참석(2.26, 중앙통신·중앙통신)
-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곽범기, 김창섭, 조연준, 김경옥, 리재일, 최취, 황병서, 동영일과 도당책임비서들 참가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2.26, 중앙통신)
- 3/3,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약전기계공장 현지지도(3.3, 중앙통신·중앙방송)
- 강관일 · 황병서 · 홍영철(黨 부부장들)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월 24일 평양에서 개막(2.24, 중앙통신)
    - 김기남(보고), 최태복(개회사), 김평해, 광범기, 김창섭, 조연준, 태종수 등 참가
  - 전국의 선거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공개서한'에 호응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결의모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선거구들에서 진행(2.24, 중앙통신)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2.26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연설(2.25,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결사관철과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상사업 총력' 등 강조(2.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의 식수질 지시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들의 궤기모임, 3월 2일 '장정남'(연설)이 참가한 가운데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서 진행(3.2, 중앙방송)
    -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평해, 광범기, 로두철, 조연준 등이 참가

## 나. 경제

- 北, 농업개혁 속 "간부 부인 2천여명 농사일 자원"(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황해북도) 신계군 안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라며 "최근 2천여 명의 여성들이 군 안의 농장들에 진출했다"고 전함.
  - 신문은 "군당위원회 일꾼(간부)들의 아내들이 남 먼저 농촌 진출의 깃발을 들었다"라며 이들의 뒤를 이어 군 인민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인민보안서 간부의 부인들과 여러 분야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농촌에 진출했다고 밝힘.
  - 이어 간부 부인들이 농사일을 자원한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등 보건부문과 식당, 편의봉사시설 등 '비생산 단위'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도 잇따라 농민이 되기로 자원했다고 소개함.
- 北,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맞아 농업 개혁 강조(2/25,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사회주의 대지에 빛을 뿌리는 농촌테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농촌건설의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를 밝혔으며 김 주석의 '업적'을 부각함.



- 이어 "오늘 김정은 동지에 의해 위인들(김일성·김정일)의 농촌건설 사상과 영도가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세기 농촌건설의 진로를 명시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도 1면 사설에서 "농사의 주인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라며 "모든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이(성과가) 나게 해야 한다"고 독려함.
- 이어 "농촌테제 발표 50돌이 되는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 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라며 식량증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기타 (대내 경제)

- 농업성 안의 공무원들, 김정은 서한을 받들어 학습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들 강구(2.24, 중앙통신)
- 평양시, 희천9호발전소 건설 성과(발전소 좌안1선가물막이 공사 종료) 선전(2.25, 중앙통신)
- 김일성 저작 발표 50주년을 맞아 '저작은 농촌문제 해결에서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 문헌이며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라며 '사회주의 농촌건설 위업은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2.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을 '경제강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절세의 애국자'라며 "기계제작공업의 CNC화 실현, 주체비료·비닐론 생산" 등 '지식경제형강국건설 노고 등 혁명생애 업적' 칭송(2.26, 중앙통신)
- 평양식료연합기업소, 2월 생산계획 완수(2.27,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7, 중앙통신)
  - 박봉주, 곽범기,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보고)·리철만·리무영(내각부총리들) 등 참가
- 김일성 저작(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1964.2.25) 5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2월 28일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노박막형 태양빛전지를 나라의 실정과 원료조건에 맞게 개발하였다"며 "태양빛전지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해결하였다"고 보도(2.28, 중앙통신)
- 평양화학품공장, 2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완수(2.28, 중앙방송)
- 개성시에서 2.23 "도시거름 6,120여 톤을 농촌에 전달"과 '자강도 1월 공업총생산계획 108% 초과 달성 성과' 보도(3.1, 중앙방송)



#### 다. 군사

- **北, 사거리 200km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2/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오늘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스킨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함.

#### 라. 사회문화

- **WHO "北 자궁경부암 사망률 동아시아 평균 2배"(2/27, 미국의소리(VOA))**
  - 북한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동아시아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WHO와 스페인 '카탈라 중앙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北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국토관리 매진하자"(2/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가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회의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광범기 당 비서,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 위원장과 당·정·군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문한 대로 지하·산림·해양 등 자원을 보호하고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며 강하천에 여러 시설물을 건설하고 홍수 방지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기자동맹 위원장 차승수로 교체 확인(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라며 차승수를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함.



- 北 전역서 '식수절' 기념행사...나무심기 독려(3/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노동자, 농민, 여맹원, 청소년들의 식수절 맞이 '펼기모임'이 모란봉, 만경대혁명사적지, 중앙식물원 수목원, 4월 15일 소년백화원에서 각각 열렸다"고 전함.
  - 통신은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나무를 심었다고 덧붙임.
  - 노동신문은 2일 2면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년 전 식수절에 한 군부대를 찾아 나무 두 그루를 직접 심었고, 어느 해 9월 말에는 간부들과 함께 직접 잔디씨 뿌리기를 했으며 산림녹화·도시녹화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의지와 '애국심을 부각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50돌을 기념하여 '개별우표' 1종 발행(2.24, 중앙통신)
- 北, 옥류아동병원과 전국 소아병원들을 연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새로 수립(2.24, 중앙방송)
- 北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은 '2013년 진행된 국제·국내 경기들에서 19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며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의 성과를 선전(2.25, 중앙통신)
- 상업과학연구소에서 고구마를 주원료로 "새로운 건강식품 고구마 아이스크림" 생산 및 인체건강에 미치는 효능(항암효과 등)과 제조법·경제성 등 소개 선전(2.26, 중앙통신)
- 北 중앙동물원, '21종의 50여 마리 관상용 및 애완용 개들과 30종 400여 마리의 앵무새와 기니아 피그(guinea pig)를 새로 들여왔다고 소개(2.27, 중앙통신)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2.4~28) 폐막식, 2월 28일 최태복(당 중앙위 비서)·리종무(체육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2.28, 중앙통신)
- 김정은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민대학습당에 50여차례 걸쳐 2만1,770여부의 도서와 자료들(정치, 경제, 군사부문 등)을 보냈다"며 인민대학습당에 "도서·자료들, 정보원천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선전(3.1, 중앙통신)
-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사격장·활쏘기장·전자유희 오락시설들과 식당 등), 3.1 '봉사 시작 및 수많은 사람들 이용' 선전(3.1, 중앙방송·중앙통신)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유니세프, 올해 대북예산 2천300만 달러 산정(2/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2천300만 달러(약 246억원)를 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사업에 가장 많은 840만 달러를 투입해 식량이 부족한 임신부와 가임여성, 12개월에서 6살 미만의 유아 490만명에게 복합영양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이며, 식수·위생 분야에 590만 달러를 배정했고 보건(530만 달러)과 교육(58만 달러)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사업은 1살 미만의 영아 35만명과 임신부 36만명에게 면역력 강화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식수사업에는 주민 2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RFA가 소개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4년째 '위험국가' 지목(2/25, 자유아시아방송(RF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중순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을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의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국가로 지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이 기구는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관련자산을 동결할 것을 권유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RFA가 밝힘.
- **"北,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구제역 방역 지원 요청"(2/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구제역 피해와 관련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FAO는 북한이 지난 23일 구제역의 방역 및 퇴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힘.
  - FAO 관계자는 "구제역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가축 전염병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구제역 피해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함.
- **중국기업 대북 투자는 '난색', 인력 도입은 '환영'(2/26, 중화망(中華網))**
  - 중국 인터넷매체 중화망(中華網)은 랴오닝성 다롄(大連)에 본사를 둔 대



형 수산물 가공업체인 아시아어항(亞州漁港·asiasea)이 북한 측과 인력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22일 1차로 49명의 근로자를 도입했다고 26일 전함.

- 아시아어항 관계자는 "2~3년 전에는 숙련된 근로자의 월급이 3천~4천 위안(53만~7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천~6천 위안(88만~105만 원)에 달하고 성수기에 잔업수당을 포함하면 월 1만 위안(175만 원)에 육박한다"면서 "이번에 북한 근로자 도입이 성사돼 인건비를 30%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英 "北 주민에 외부접촉 기회 주려 교류사업"(2/27,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지난 24일 의회에서 영국이 북한과의 전면적 외교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계획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적절한 수준의 교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일본, 내달 3일 선양서 적십자 실무회담(2/27, NHK)**

- 일본 외무성은 내달 3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함.
- NHK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북한측 요청으로 열리게 됐으며, 형식은 적십자사간 접촉이지만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배석할 예정이어서 정부 간 정식 대화에 앞선 당국 간 예비회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함.

● **1월 북중 교역액 전년보다 16% ↑... '張 속칭' 영향없어(2/2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올해 1월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5억4천600만 달러(약 5천830억 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1월의 4억7천100만 달러보다 15.9% 증가한 액수임.
-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2천300만 달러, 수입액은 3억2천300만 달러였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 1월보다 각각 18.0%와 14.5%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의 지난달 수출액은 1억155만 달러(약 1천85억 원)로, 작년 1월보다 21.3% 늘었으며, 같은 기간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2천365만 달러로, 전년 동기(2천330만 달러)와 비슷함.

● **세계식량계획, 대북 지원에 320만弗 긴급 투입(2/28, 자유아시아방송(RFA))**





할 예정이다.

- 양측은 시범적으로 2년간 매주 목요일에 2차례씩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우편물 운송차량을 운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차량 대수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며, 이 통로를 통해 북한 나선시로 반출이 허용되는 물건은 국제적으로 우편물 형식으로 허용되는 서류와 소포 등임.

● **北 신문, 3·1절 맞아 '외세 배격' 강조(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절을 맞아 1면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지' 제목의 사설에서 "3·1 인민 봉기자들의 애국적 기개를 이어받아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이어 "북남관계 문제,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함.
- 6면 '일본의 최악의 역사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도 "지금 일본은 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서 3·1 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비롯한 대중적 학살만행과 그 외의 모든 죄행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함.

● **北, 美 케리 장관 발언 비난..."북미 현안 안풀려"(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惡)'이라고 한 발언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는 한 조미(북미)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릴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1월말 극비 북일접촉에 北 보위부인사 참석"(3/2,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부인해온 지난 1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일 간 극비 접촉설이 사실이며, 당시 북한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함.
- 산케이는 북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1월 25~26일 하노이를 극비리에 방문, 북한 노동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와 회동했다고 전함.



#### ■ 기타 (대외 일반)

- 日 수상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비호 두둔하는 정객들의 발언 관련 '일본의 고위 정객들의 잡소리는 국제사회의 우롱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조언(2.24, 중앙통신)
- 박의춘(외무상), 2월 25일 주북 파키스탄 신임대사(사이예드 하산 하비브)와 담화(2.25, 중앙통신)
- 일본 외상의 발언(유사시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 반입을 반대하지 않음)에 대해 '상전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전의 묵인·비호를 받으며 핵무장화를 추진하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하며 '일본의 비핵3원칙 견지할 것'을 촉구(2.25, 평양방송)
- 김영남과 박봉주(내각 총리), 2월 25일 쿠웨이트 '독립' 53주년과 '해방' 23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추장과 내각수상에게 각각 축전(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궤방책동(北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는 일시적 유화책' 등으로 비방중상)' 지속 비난과 "미국의 간섭책동을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反외세 배격투쟁' 강조(2.26, 평양방송)
- 미국의 'KR·FE연습'은 "우리(北)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이라며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깨고 남한 당국이 동족과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2.26, 평양방송)
- '미국이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아·태지역에서 찾으며 패권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2.27, 중앙통신)
- 日 외무성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 관련 '역사주의 원칙과 학술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강도적 논리'라며 '영토팽창 야망 실현의 선행공정'이라고 비난(2.27, 평양방송)
-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미국은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대결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고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에 도전하는 내외 호전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2.28, 평양방송·노동신문)
- 미국이 태평양에 군함을 주둔시키는 것과 일본의 자위대 무력강화 등을 거론하며 '亞-太 지역이 세계제패 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책동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책동으로 거대한 군사적 대결마당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2.28,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리길성 부상), 3.1 이란 방문 후 귀환(3.1, 평양방송·중앙통신)
-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 1일 회담 개최지인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도착(3.1, 연합뉴스)
- '온 겨레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으나 미국이 찬물을 끼얹으며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낼때 강행하였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반전 평화수호 투쟁' 선동(3.2, 평양방송)



### 3. 대남동향

####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실천적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해야"(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온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라는 글에서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등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남관계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나 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을 시대와 민족은 용납치 않는다"고 주장함.
  - 이어 "부당한 구실과 주장, 요구와 조건을 내대며 북남관계 개선을 질질 끈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태도와 입장이 아니다"며 "말로 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임.
  
- **北 노동신문 "이산상봉, 남북관계 전면개선 출발점"(2/2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25일 '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 행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화해,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민족의 요구"라고 밝힘.
  -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앞으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문 "키리졸브 연습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도전"(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거론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함.
  - 이어 '키 리졸브'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해 "전쟁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기 위한 서푼 짜리 술책"이라고 반박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면서 대조선지배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함.
  
- **北경비정 1척, 어젯밤~오늘새벽 3차례 서해NLL 침범(2/25,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노티컬마일(23.4km) 해상에서 북한군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



의 대응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북한군 경비정이)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새벽 0시25분 마지막 침범했을 때는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도 북한 경비정은 지그재그로 북상하면서 2시간 정도 NLL 남쪽에 머문 것으로 알려짐.

● **北신문 "서해 평화수역되면 군사충돌 막을 수 있다"(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 이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밝힘.
- 신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방안이 담긴 10·4선언 대로만 하면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조선 서해가 평화 수역으로 전환된다면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정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단체, '3·1절 95주년' 공동호소문 발표(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한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1일 호소문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전민족적 조국통일 운동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굳게 단합해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민족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자"라고 주장함.
- 이어 "반목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5개 업체 철수(3/2,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지금까지 우리 입주 기업 5곳이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관계자는 2일 "가동 중단 기간에 해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실질적인 개성공단 생산액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역액은 지난 1월 기준 1억 6천 949만 달러로, 가동 중단 전인 지난해 1월(1억 8천63만 달러)보다 6.2% 감소함.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및 6자회담

- "美-러 북핵 대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논의"(2/2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 "양측이 한반도 정세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데이비스 대표는 모스크바에 이어 26일 스톡홀름에서 프랑크 벨프라츠 스웨덴 외교부 차관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뒤 27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스웨덴은 북한에서 대북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나라로, 특히 최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케네스 배 씨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케리 "북한은 惡, 가장 잔인한 곳...책임 물어야"(2/2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악(惡)'이라고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등에 대해 비난하고, 전세계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최근 중국 방문 기간에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음.
  - 케리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확산 시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날 발언은 수위가 한층 높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 대북정책의 향배가 주목됨.

#### 나. 미북 관계

- 힐 전 미차관보 "올 오어 낫싱' 대북정책 안돼"(2/27,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앵글 민주당의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버락 오바



마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호전적인 국가와 협상하는 게 꺼려진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북한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가 '전부 또는 전무' 접근을 포기하는 대신 과도기적인 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거나 이미 가장 고립적이고 제재를 많이 받는 북한을 처벌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美 "北인권 개탄스러운 상태...공포·억압 만연"(2/2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는 지난해 표현과 똑같은 것이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grim), '극도로 열악하다'(extremely poor)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기했던 국가보안법 해석 논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새로 포함했음.

### ● 미국 "北 자제하고 주변국과 관계개선해야" 촉구(2/2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쟈 스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 및 역내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으로부터의 핵확산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가 나온 상황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자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한편,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면서,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허용돼 있다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 중북, 핵실험으로 침체된 '정치교류' 복원 징후(2/24, 연합뉴스)

- 중북 관계에 밝은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올해 들어 중북 간에 실무자급 교류를 포함한 일상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음.
- 이달 들어 중국 외교부 이주사 책임자의 방북에 이어,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을 두고 중국은 "중조 간 외교부문의 관계적 교류활동"이라고 표현했으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제3차 핵실험으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연속 방북'이라는 평가가 나왔음.
-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핵실험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류 부부장은 2011년, 2012년 연초에 방북했던 사례가 있고 당대 당 교류는 늘 있었다는 점을 보면 최근 교류가 새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작년 초가 오히려 예외였다"고 전했음.
- 이는 올해 초 들어 양측이 보이는 정치·외교적 인적교류가 지난해 핵실험 정국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양측이 핵실험으로 초래된 정치·외교적 냉각관계를 점차 봉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음.

## 라. 일북 관계

### ● 북한·일본, 내달 3일 선양서 적십자 실무회담(2/27,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북한측 요청으로 내달 3일부터 9일까지로 중국 선양에서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 형식은 적십자사간 접촉이지만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배석할 예정이어서 정부간 정식 대화에 앞선 당국간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주 의제는 북한내 일본인 유골 송환 문제이지만, 이 협의에 이어 정부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및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일북 적십자사 간의 접촉은 2012년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이후 약 1년 6개월만이자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며, 앞서 이치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가 작년 5월 방북 이후 북일간 물밑대화설은 계속 제기되어 왔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미군, 한미훈련에 B52 전폭기 투입 계획" <日신문>(2/24, 연합뉴스)**
  - 니혼게이지신문은 미군은 24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 이는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중지를 요구한 북한이 반발, 도발을 강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군은 B52 투입 및 공중 폭탄 투하 훈련 실시를 통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 미군은 작년 한미 연합훈련 때도 B52를 투입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를 시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다 있음.
  -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번 한미 훈련에 반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동향을 주시 중이며, 이와 관련한 한미일 실무자 협의 개최를 타진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 **美육군 44만~45만명으로 축소...주한미군 감축없어(2/25,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미국 육군이 앞으로 수년 내에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 개요를 발표했다.
  - 헤이글 장관은 앞으로 육군을 기동력과 현대화, 정예화에 초점을 맞춰 병력 규모를 44만~45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는 2차대전 개전 이래 최소 규모라고 밝혔으나, 주한미군의 경우 현행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헤이글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의 전반적 감축에 따라 병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작전에 필요한 병력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 워싱턴 소식통은 "주한미군의 경우 한반도 상황이 엄중헌데다 아시아 중시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중국 "류전민 남북 연쇄방문, 긍정적 성과"(2/24,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뤄진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의 남북한 연쇄방문과 관련, "남북 양측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면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음.
  -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등 중국의 3대 원칙을 소개하면서 관련국들도 중국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북한 측은 류 부부장에게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
  - 한편, 한국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류 부부장과의 회동 당시 "중국측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 "한중, 시안에 광복군 기념비 설치 합의"(2/2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이 산시성 시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이 주둔한 시안시 창안구 두취진 지역에 정자를 제작, 비석을 세우는 방식으로 기념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조만간 기념비를 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념비 설치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29일 시안에서 자오정용 산시성 당서기 등과 면담하면서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의 허가를 요청함으로써 본격화됐으며, 정부는 비석에 들어가길 원하는 문구를 중국 측에 전달한 상태로, 중국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비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뒤, 하얼빈역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을 거론하면서 일본을 향한 '포위외교'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 중국이 핵 보유를 반대하는 5가지 이유는(2/25, 연합뉴스)
    -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25일 환구시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 북한의 핵실험은 첫째, 중국 동북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 및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됨, 둘째, 핵확산 위험도를 높여 중국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넷째,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다섯째,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를 망가뜨려 해외에서의 중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의 기고문은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국내 일부 인사들의 견해에 대한 반박차원으로 나온 것이며, 자 원장은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이를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당국자 "韓 요청하면 中도 '동해 병기' 검토 기류"(2/26, 연합뉴스)
    -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만난 중국의 당국자가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동해 병기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고 함.
    - 이와 관련, 최근 한국과 중국의 정치인 교류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



는데, 국회 대표단 일원으로 지난 20~23일 중국을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중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중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자 중국 당국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향후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중국 외교부는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일본과 이웃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해, 이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음.

#### 다. 한일 관계

##### ● 정부 "다케시마의 날은 도발...과거사 부정 행태"(2/22, 연합뉴스)

- 정부는 22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회피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음.
- 특히 정부는 이번 독도 도발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의 연장선으로 분명하게 규정했음.
- 정부는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앞으로도 핑계를 대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많은 일본의 양심 세력과 함께 일본의 그런 역사수정주의적 움직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는 금명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와 동영상의 영문 버전을 곧 공개하는 등 후속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임.

##### ● 일본, 고노담화 검증 시동...유신회, 기관설치 제안(2/25,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25일 열린 중의원 운영위 이사간담회에서 고노담화 검증기관의 국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여야는 이를 각자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했음.
-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중심으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황상 아베 신조 총리와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어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언급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뒤로 한발 빠지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등 내각의 요인들은 이미 고노담화 검증 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 행보에 경고를 보냈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아베 정권이 '군 위안부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日, 韓 '동해외교'에 쫓았나...비판 동영상 유포(2/25,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24일 홈페이지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자국의 주장을 담은 그래픽과 지도 등에 내레이션을 입힌 5분27초 분량의 일본어 동영상을 올렸으며, 이 동영상을 영어와 한국어로도 제작해 유포할 예정이라고 함.
- 이 동영상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18세기말부터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 명칭이 20세기 초반에서야 일반화했다는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번 조치에는 최근 미국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한국의 동해 병기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한 일본 당국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자 일본은 반대 로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라. 미·중 관계

● **美육참총장 "美육군-中인민해방군 정례 대화 추진"(2/22,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 중인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 참모총장은 미 육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정례 대화 및 교류 프로그램을 연내 시작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오디어노 참모총장은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호주, 일본, 한국 등 동맹국과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해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촉발된 중국과 일본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양국이 건설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 중국과 군 대 군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참모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오디어노 참모총장은 팡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등 중국군 고위 간부들을 잇달아 만나 양군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美·中, '북핵 패키지 해법' 만드는 중"(2/27,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패키지 해법에는 한국의 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으며, "최종 합의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이르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감지할 만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주중 美대사, 중국에 사법독립·언론자유 촉구(2/27, 연합뉴스)**

- BBC 방송 중문판은 게리 로크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이임을 앞두고 26일 베이징에 있는 미국센터에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별 강연에서 중국의 미래는 사법독립과 언론자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중국의 미래는 위대하나 중국의 모든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법제도와 직분에 충실한 변호사단, 지혜로운 법조계 지도자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로크 대사는 또 중국 당국에 외국 기자들을 "더욱 평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중국은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에 자신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로크 대사의 이런 행보에 대해 중국 민심을 잡기 위한 신식민주의식 위장이라며 소라고 비판했다.

● **중국 "미국 인권문제 심각·악화"...'맞불 보고서'(2/28, 연합뉴스)**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8일 미국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여러 부문에서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 미국 인권기록' 보고서를 공개했다.
-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폭력 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총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이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안팎을 대상으로 장기 대규모 감시를 해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중국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이 해마다 중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인권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됨.

마. 마일 관계

● **아베정권, 美에 불만 팽배...대미외교 딜레마(2/23, 연합뉴스)**

- 일본 교도통신은 23일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주위에 "오바마는 너무 '비즈니스 라이크'하다.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아베 총리의 작년말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이 '실망했다'는 입



장을 밝힌데 대해 최근 에토 세이치 총리 보좌관이 '실망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린 일은 아베 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일본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데다 미일동맹이 균열되는 모습은 중국이 내심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딜레마는 미국에 이런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임.
- 한편 미국 민주당 행정부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불만은 결국 내년말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美日, 내달 국제기구에 방공구역 제기...中견제"(2/27, 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달 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 이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면서 민항기에 비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중국의 조치는 유엔해양법 조약에 저촉된다는 점, 유엔 해양법 조약이 정하는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 등에 의견일치를 봤음.
- 다만, 미일은 대립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ICAO 이사회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일본, 연구용 플루토늄 300kg 미국에 반환 방침"(2/28, 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는 냉전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으로 제공받은 플루토늄 300여kg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음.
-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의 고속로 임계 실험장치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용 플루토늄 331kg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드라이브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플루토늄 반환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
- 대신 일본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반환할 플루토늄보다 덜한 '대체 플루토늄'의 제공을 미국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핵연료 주기'시설을 완비한 일본은 현재 약 44t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양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나라로 분류되고 있음.

바. 마러 관계

● 케리 "우크라 파병은 침략행위...대가 치를 것"(3/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CBS·ABC·NBC방송 등 미국 3대 공중파 방송의 휴일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러시아의 파병에 대해 "이는 믿을 수 없는 '침략 행위'라면서 "심각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케리 장관은 특히 러시아의 파병에 대응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된 위반은 국제사회 내 러시아의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러시아의 계속되는 국제법 위반은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사. 중일 관계

#### ● **중해경선, 센카쿠 12해리 진입...올해 5번째(2/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 선박이 23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12해리(22km) 해역에 진입했고, 이는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이며 올해 들어 5번째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통신은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이날 오전 9시경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잇따라 진입한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했으며, 중국 측 선박은 센카쿠 12해리 해역에 진입한지 2시간 만에 접속수역으로 빠져 나갔다고 전했다.
- 일본은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대책실'로 격상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 **중국 "日, 무기급 플루토늄량 공개하고 해명하라"(2/25,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일본은 평화적 목적에서 핵물질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평가해달라"는 기자 요청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론하며 "무엇을 근거로 대량의 핵물질이 어떤 안전 문제도, 어떤 핵확산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며 "책임지는 자세로 국제사회에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 이어 화대변인은 "일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기급 플루토늄과 일반 플루토늄을 보관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국정부는 최근 미국이 과거 일본에 제공한 연구용 플루토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일본이 보유한 핵물질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 이는 중국이 내달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이 보유한 대량의 핵물질의 문제점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의도 아 나타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 **"중국, 日전역 타격권 순항미사일 대거배치"〈대만언론〉(2/25, 연합뉴스)**

- 중국시보는 25일 미국의 아시아 안보정책 연구기구인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일본 열도 전역을 타격 범위 안



에 둔 초정밀 순항미사일을 대거 실전 배치해 일본과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창젠-10 미사일을 비롯해 잉지-62, 잉지-63, 창젠-20 미사일 등이 최근 중국이 전력화한 대표적인 지상공격 순항미사일(LACM)이며, 이 중 창젠-10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 수단이 되고 있음.
- 중국은 일본 또는 대만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미국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상황을 장악하는 전술적 목표가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음.
- 보고서는 중국이 사거리 1천km 전후의 준 중거리 미사일인 동평-16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사거리 5천km 이상의 신형 ICBM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소개했음.

### ● 중국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 뒤집기 절대 불허"(2/27,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7일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과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한 직후 별도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 역사를 뒤집는 행위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음.
- 전날인 26일에도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오전 중국의 난징대학살 추모일을 제정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 이유는 일본이 마땅히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의 "아베 노믹스에 대한 그의 생각은 군비확장 및 전쟁준비"라고 지적했으며, 2차대전 중 일본에 끌려가 일한 중국인 유족 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베이징 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서도 일본 측을 비난했음.

### 아. 기타

#### ● TPP 협상 합의없이 종료...5월 재협상 가능성(2/25, 연합뉴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중이 12개국은 지난 22일부터 4일동안 싱가포르에서 TPP 협상을 연 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를 향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관세 철폐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은 TPP 협상 참가국들이 오는 5월 다시 장관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오는 5월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두 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있음.
- TPP 협상에 참여 중인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에 관해 큰 입장차를 보여 이번 회담에서 협상타결이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영유권 공세속 일본-필리핀 해경 합동훈련(2/26, 연합뉴스)**

- 필리핀 매체들은 26일 필리핀 해경이 25일부터 마닐라만 등지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함께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영유권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됨.
- 일본 해상보안청과 필리핀 해경은 훈련기간에 영해 침범과 불법 조업에 대한 법 집행과 규정 적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폭넓은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일본 정부는 필리핀과 중국을 겨냥한 공조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6월 마닐라를 방문해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나 국방공조 방안을 협의한 바 있음.

●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숨고르기' 들어갔다(2/28,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중국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최소한 단기간 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한 데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선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이 드러난다고 분석했음.
- 방송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수주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영유권 주장 강화에 나서지 말도록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하지만 해군 전문가인 니러송 상하이정법대 교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베트남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베트남이 미본 동맹에 가담해 중국에 맞설 것으로 우려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음.

● **"중국, 동아시아 최대 무기 수입국...한국 제쳐"(2/28, 연합뉴스)**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넷판은 컨설팅업체 IHS의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방위장비 수입국이 됐다고 전했다.
- IHS는 전날 발표한 연례 무역수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방위장비 수입액이 전년보다 52.6% 증가한 23억달러이며, 중국이 방위장비 수입을 늘리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방위장비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음.
- 한국은 이런 추세의 수혜자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IHS는 한국이 내년에 중국을 따라잡고 역내 최대 방위장비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폴 버튼 IHS 방위 담당 디렉터는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한국산 방위장비가 품질이 좋아 신흥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 Ⅲ. 북한 인권 동향

####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5살 미만 28% 만성 영양실조(자유아시아방송, 2.24)**
  -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4일 '2014 아동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를 내고 올해 만성 영양실조(chronic malnutrition)를 앓고 있는 5살 미만 북한 어린이가 전체의 28%에 달한다며 북한 내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
  - UNICEF는 올해 대북 사업을 위한 총 예산을 2천 30만 달러로 산정했으며, 지난해 대북 사업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총 2천 200만 달러의 지원을 당부했지만 결국 54%인 1천 200만 달러만 걷혔다면서 올해 대북 사업에 관심을 촉구
  - 올해 예산으로 식량이 부족한 가임 여성, 임산부, 수유모, 그리고 12개월에서 6살 미만의 유아 490만 명에게 미량 복합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예정
  - 보건 사업의 일환으로는 1살 미만의 북한 영아 35만 명과 임신한 여성 36만 명이 면역력 강화 백신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계획
  - 또한 대북 식수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20만 명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100만 명이 적절한 위생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특히, 올해 전체 예산 2천30만 달러 중에서 가장 많은 840만 달러를 영양 사업에 집중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1%에 해당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시사
  - 식수와 위생 분야에 590만 달러, 보건 분야에 530만 달러, 그리고 교육 분야에 58만 달러를 배정
  
- **FATF "북, 돈세탁 최대 위험국"(자유아시아방송, 2.2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지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달 중순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과 이란을 국제 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 국가로 지목하면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계자는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





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 행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삼아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온 겨레는 오늘의 성과가 북남관계개선의 충실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상봉 행사 종료 소식을 비교적 신속하게 전하면서 "우리 측 상봉자들은 공화국의 품속에서 존엄 높고 긍지 높은 삶을 누려온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고하면서 남녘의 가족, 친척들에게 사회주의 조국의 고마움에 대해서 걱정에 넘쳐 말했다"라며 이는 "남녘의 혈육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라고 언급
- 또한 두 방송은 남북 이산가족들은 "작별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임.

#### ● 북, FAO에 구제역 지원 공식 요청(자유아시아방송, 2.25)

- 북한 당국의 구제역 방역 및 퇴치지원에 대한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정부측과 식량농업기구 관계자가 만나 지원에 관한 대책 회의를 가짐.
-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구제역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실사단(assessment team)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 식량농업기구 실사단의 방북 일정과 구성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5일에 태국 방콕의 식량농업기구 지역 사무소에서 2차 대책 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북 구제역 지원의 방식과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 당국이 요청을 해 온다면 북한 측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

#### ● 북 대의원후보자들 이례적 친 주민행보(자유아시아방송, 2.25)

-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직접 인민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생활을 돌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향도 좋다"고 소식통들은 언급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월 20일부터 해당 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주민조사에 나섰다"며 "인민반회의를 열고 주민들 앞에서 직접 자신들을 소개하기도 해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
- 양강도의 또 다른 주민소식통은 "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우리 인민반을 찾아온 대의원 후보자가 생활이 어려운 1층 6호에 식량 40kg을 즉석에서 지원했다"고 언급
- 함경북도의 소식통은 "인민반에 나온 대의원후보자가 주민들 앞에서 자신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묻기도 했다"면서, 후보자가 주민들의 조언을 구했으나 아무도 발언하는 사람은 없었고 결국 인민반장이 주민들



- 을 대신해 "말로만 인민생활을 돌본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민생활을 돌보는 참된 일꾼이 되길 기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
- 소식통은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미리 짜고 한 것인지 몰라도 인민반장의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었다"며 "이런 말은 자칫 이전의 대의원들은 모두 '인민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들렸다"고 강조
  - 하지만 소식통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변화가 계속 유지 되겠는지는 의문"이라며 대의원 후보자들의 주민활동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

### ● 탈북자 단체들, 실리콘밸리에 도움 요청(연합뉴스, 2.25)

- 미국을 방문중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 지역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풍선을 띄워 전단을 뿌리는 일과 DVD와 USB 메모리 등을 북한에 밀반입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 이들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
- 강 대표와 박 대표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기 위한 풍선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실리콘 밸리 엔지니어들이나 기업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USB 메모리와 공 DVD 등을 이들로부터 기부 받아 북-중 국경을 통해 밀반입토록 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음.

### ● 北주민 70% "아플땐 장마당서 약 구입"(세계일보, 2.26)

- 서울대의대 통일의학센터 김석주 교수는 2012~2013년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북한 주민의 질병 행태와 의료문화' 자료를 발표
-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시장원리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의약품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적 민음을 시행할 정도로 건강 인식 체계가 왜곡돼 있고 지식도 부족
- '몸이 아플 때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기침이 나고 열이 있는 경우 병원을 찾은 사람은 22명(11%)이었던 반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사람은 139명(69.5%),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사람은 36명(18%)
- 상처가 생겨 피가 날 때도 병원 37명(18.5%), 장마당 104명(52%),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5명(27.5%),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플 때도 병원 장마당 32명(16%), 아무 데도 가지 않음 9명(4.5%)
-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허용)는 '돈이 없어서'(120명),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효과가 없어서'(68명),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어서'(42명),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37명)라고 대답
- 의약품이 부족하다 보니 병을 고치기 위한 수술적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약이 필요할 때 없었던 경험이 많기에 약을 재산 가치로 인식해 모으는 경향이 있음.

- 北, 농업개혁 속 "간부 부인 2천여명 농사일 자원"(연합뉴스, 2.26)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황해북도) 신계군 안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라며 "최근 2천여 명의 여성들이 군 안의 농장들에 진출했다"고 보도
  - 신계군 중심지에서 살던 이 여성들은 농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농장에서 농사일하겠다고 앞 다투어 자원한 것으로 보임.
  - 노동신문은 "군당위원회 일꾼(간부)들의 아내들이 남 먼저 농촌 진출의 깃발을 들었다"라며 이들의 뒤를 이어 군 인민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인민보안서 간부의 부인들과 여러 분야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농촌에 진출했으며, 자원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등 보건부문과 식당, 편의봉사시설 등 '비생산 단위'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도 잇따라 농민이 되기로 자원했다고 소개
  - 예전에도 도시 주민이나 공무원 등 농사와 관계없는 업종에서 일하던 주민들이 농장에 이주하는 사례는 없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한 개 군에서 몇 천명 규모로 농사일을 하겠다고 지원해 나선 경우는 이례적인 일
  - 몇 천 명의 주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민이 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농업개혁 조치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
  -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이모씨는 전업주부 등 여성들이 농사일을 자원하는 현상에 대해 "장사가 잘되는 도시와는 달리 산골 군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일거리도 마땅히 없다"라며 "군당이나 군 인민위원회 간부들도 생활이 어려워 부인들이 농사라도 지어 먹고살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언급
- 北, 선거 前 적대행위 차단 주력..."우상화물 '특별경비'"(데일리NK, 2.27)
  - 북한 당국이 내달 9일에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주민감시 강화와 함께 김정은 일가와 관련된 우상화물에 대한 특별경비를 각 지역에 지시
  - 양강도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 '특별경비' 지시가 내려와 인민반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회의에서는 '불순분자들이 언제든 지 책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성을 가지고 인민반과 담당 구역의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사항이 전달됐다"고 전함.
  - 또한 각 지역에 노동자 자치 규찰대가 꾸려져 군수품 및 식료공장, 신발공장 등 담당구간에 대한 순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일가와 관련한 건물들에는 주야로 경비인원들이 배치



- **'북한 여성, 암 중 폐암 발병 가장 많아'(미국의 소리, 2.27)**
  - 세계보건기구(WHO)가 스페인의 '카탈라 중앙연구소'와 공동 운영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은 폐암이며, 사망률 역시 폐암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고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전세계 암 발병율과 사망률 자료'를 근거로 제시
  - 폐암 발병율은 10만 명 당 52 명, 유방암 45.7 명, 대장암 26.8 명, 자궁경부암 15 명 순
  - 사망률에 있어서는 폐암이 10만 명 당 47.8 명으로, 두 번째인 유방암의 18.7 명 보다 2.5배나 많았고, 대장암 (12.1 명)과 간암(10.2 명)이 뒤를 이음.
  - 한편 북한에서는 해마다 1,119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여성 10만 명 당 9명꼴로, 보고서는 북한에서 전체 여성 암 사망자 가운데 자궁경부암 사망자가 6번째지만, 15세에서 44세로 한정하면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실정이라고 밝힘.
  - 세계보건기구는 9세에서 13세 사이 모든 여아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아직 이런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북 전력난으로 방해전파 느슨해져(자유아시아방송, 2.27)**
  - 김정은 집권 이후 강화되었던 북한의 남한 텔레비전에 대한 방해전파 발사가 다소 느슨해져 남한 텔레비전 시청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성적인 겨울철 전력난 때문인 것으로 추정
  - 함경남도의 주민소식통은 "함흥이나 원산, 청진 등 주로 해안 지역에서 남한 텔레비전 전파가 잘 잡히는 곳이 많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해전파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던 남한 텔레비전이 최근 들어서는 예전 수준을 되찾았다"고 설명
  - 남한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방해전파가 느슨해진 이유에 대해 소식통들은 해마다 겨울철이면 반복되는 북한의 전력난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
  - 남한 텔레비전의 전파가 잘 잡히는 지역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를 시청하려면 중국에서 밀수로 유입되는 노트텔(Note TV)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티브이와 전원공급 장치인 태양열 발전기 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름.
  - 또한 보안당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야 하고 혹시라도 적발되었을 경우 이를 무마 시킬 만한 뒷배와 사법당국에 고일 뇌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중, 상류층 사람들이 주된 시청자임.
  - 한편 국경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불법 중국 휴대전화에 대한 방해전파도 최근 들어 상당 부분 느슨해졌는데 이 또한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때문인 것으로 추정





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요즘에는 '꽃제비 돌격대'라는 걸 만들어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중국에 들어온 한 평양 주민은 "꽃제비가 줄어들기는커녕 통제가 더 강화되었다"면서 "지금 각 구역마다 '꽃제비 돌격대'가 조직돼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
- 평양시 송신여관과 과학자 여관은 대표적인 꽃제비 보호소로, 여기서 보통 17세 이상의 꽃제비들을 선발해 돌격대를 조직해 아파트 건설장이나, 강하천 공사장에 나가 노동
- 남포시에서 중국에 여행왔다는 한 주민은 꽃제비들이 부모 없이 자라 행동이 자유분방해 설사 군에 입대시켰다고 해도 충기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고 탈영병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군사동원부도 아예 초모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주장

#### ● 남북, 김정욱씨 석방논의 본격화하나(연합뉴스, 2.27)

- 북한이 27일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씨의 억류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그의 석방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
-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남조선 정보원 첩자를 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에는 신원 확인과 함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전화통지문 수령조차 거부한 바 있음.
- 정부의 한 당국자는 "개성공단에서 유성진씨가 문제가 생겨 억류됐다가 풀려났었지만 이런 케이스는 특이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
- 이날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긴급 논평을 통해 북한에 김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
- 또한 북한이 김씨에 대한 정식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대비, 가족과 변호인의 현지 접견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부는 가족이 변호인과 함께 방북을 원하면 이를 허용할 방침

#### ● 북한일본, 내달 3일 선양서 적십자 실무회담(연합뉴스, 2.27)

- 일본 외무성은 내달 3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협의 일정은 일단 9일까지로 보임.
- NHK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북한 측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형식은 적십자사간 접촉이지만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배석할 예정이어서 정부간 정식 대화에 앞선 당국간 예비회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임.
- 주 의제는 북한내 일본인 유골 송환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협의에 이어 양측 정부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및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

#### ● 호주 정부 "북한 억류 선교사 쇼트 씨 상황 알지 못해"(미국의 소리, 2.28)



- 호주 외교부의 저스틴 브라운 영사국장은 27일 열린 호주 의회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 선교사 존 쇼트 씨가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
  - 브라운 국장은 평양주재 스웨덴대사를 통해 쇼트 씨의 소재와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와 쇼트 씨에 대한 즉각적인 영사 접근을 북한 측에 공식 요청했다며,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지적
  - 브라운 국장은 쇼트 씨 억류와 관련해 여러 다른 나라 정부들의 협력과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공개적인 발언이 쇼트 씨의 안전한 조기 석방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 통신 "유엔 北인권보고서는 美 적대행위 산물"(연합뉴스, 2.28)**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근 발표한 최종보고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난
  - 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COI 보고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압력 도수를 높여 우리 체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며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난
  - 마이클 커비 위원장에 대해서도 "워싱턴(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조작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공화국을 반대해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공조에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
  - 이어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도처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해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산생시키고 있는 인권 유린의 왕초"라며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가소로운 추태"라고 지적
- **북한-일본, 내일 선양서 1년7개월 만에 적십자회담(연합뉴스, 3.2)**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리호림 서기장과 다사카 오사무(田坂治) 일본 적십자사 국제부장 등 양측 대표단은 3일 오전부터 선양 시내 성마오(盛貿) 호텔에서 실무협의를 진행
  - 이번 회담에는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이 동석
  - 양측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를 주 의제로 협의하지만, 북일 정부 당국자가 양측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을 의제로 하는 정부간 공식 회담의 재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양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일단 3일 개최된다는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당일 회담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하루 이틀가량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 북한인권

- 김기현 "野 북한인권법은 '북한 퍼주기법'"(연합뉴스, 2.24)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견해차로 북한인권법 제정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주장은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북한 퍼주기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
  -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북한과 중북주의자들의 눈치만 본다는 국민의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북한인권법의 2월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면서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민주당의 그런 발언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난
  
- 유엔 조사위, 2013년 12월 中정부에 "탈북자 복송 반대" 서한(동아일보, 2.24)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
  - COI가 펴낸 371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COI는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
  - 또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국적이 없는 어린이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구함.
  - 보고서는 이 편지에 김정은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청문회 증언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를 적시했다고 밝힘.
  -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공관을 통해 "중국 정부는 COI가 언급한 여성 인신매매나 어린이 문제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부인했으며, COI가 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17일에도 "불법 입국한 조선인(북한인)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
  
- "北 고난의 행군 굶주림은 체제 범죄... 실향민 고향 방문은 국제법적 권리"(동아일보, 2.25)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향민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강조
  - 보고서는 "이동의 자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함한다"며 고향 이산가족들이 평생 고향 방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
  - 보고서는 "국제법상 명확한 의무는 제쳐두고라도 나이 든 세대의 희망과



- 요청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와 존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이산 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이유와 관계없이 지체되면 안 된다"고 촉구
- 또한 COI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단순한 식량 부족이라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의 결과에서 비롯된 '체제범죄'라고 규정하면서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었던 식량과 소비품 배급이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졌다면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구호품도 모두 평양에 집중했고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달러로 사치품을 구입해 엘리트의 충성심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
  -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다룬 부분에서 '집단체조와 강제 대중 동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아리랑' 등 체제 선전용 집단체조에 동원된 북한 학생들의 피해를 아동인권 침해 차원에서 집중 조명하며 4~6개월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에 하루 종일 진행되는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 몸이 상하거나 심지어 죽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소개

● "정부, 南 넘어오다 끌려간 北동포 보호 책임"(동아일보, 2.25)

-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4일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의 비협조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1950년대 이후 집계된 4만6713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중 국경관리범죄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남쪽으로 넘어오다가 걸려서 수용소로 끌려간 북한 동포 중엔 이산가족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발언
-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존권은 한 국가나 체제를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며 "북한을 자극한다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건 인간 기본권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비판
- 이원웅 관동대 교수도 "북한인권법은 통일한국에 대비해 '미래가치가 인권에 있다'는 민족공동체 선언문의 성격이 있다"고 언급

● "'反인도범죄' 북한 김정은 ICC 회부해야"(NYT)(연합뉴스, 2.27)

-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





### 3. 탈북자

- **민주평통, 탈북자 정착지원 의료봉사단 발족(이데일리, 2.2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5일 오후 사무처에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예정
  - 의료봉사단에는 에이치플러스 양지종합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단장 등 이들은 치과·한방·제약병원 등 현직 의료계에 재직 중인 의료계 민주평통 자문위원 13명과 외부 의료계 인사 2명 등 총 15명이 참여
  - 의료봉사단 발족은 지난해 10월 법률자문지원단 발족에 이어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의 일환
  - 이 운동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의 일대일 멘토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장학지원 △취업지원 등 '5대 중점사업'을 전개하는 실천운동
  -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하는 의료봉사단은 향후 정기적인 의료봉사 활동으로 현재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
  
- **북한이탈주민재단·금감원, 탈북자 대상 금융상담·교육(데일리NK, 2.2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금융감독원은 남한 사회의 금융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및 상담을 통해 금융 피라미드, 보이스 피싱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4일 '북한이탈주민 금융 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향후 재단과 금감원은 ▲탈북자 대상 금융교육 및 상담 ▲탈북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 후 공부방 지원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조해 나갈 예정
  - 정옥임 이사장은 이날 업무협약식 인사말에서 "재단이 금감원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잘 적응해서 우리사회에 올바르게 뿌리내리는 '착근(着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 **북, 탈북루트 중 쿤밍과 교역 급증...왜?(자유아시아방송, 2.25)**
  - 북한이 탈북자들의 주요 탈출 경로인 중국 윈난성 쿤밍으로부터 지난해 생필품 수입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에는 쿤밍시에 북중문화교류센터가 개소
  - 한국행 탈북자들이 주로 이용해온 주요 탈북 경유지인 쿤밍에 북한이 최근 들어 '탈북 루트 차단'을 염두에 둔듯한 행보를 잇달아 보이고 있어 주목
  - 25일 윈난성 현지에서 발행되는 '쿤밍일보'는 해관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의복, 신발 등에 대한 수입을 이례적으로 급격히 늘려, 쿤밍의 대북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쿤밍-북한



- 교역액이 3천212만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
- 정확한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이 같은 추세를 지난해 쿤밍의 주요 교역현황 중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로 언급할 만하다고 밝힘.
  -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주요 탈북루트 차단을 염두에 두고 탈북자 단속에 필수인 현지 공안당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쿤밍시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다고 분석
  - 박 소장은 나아가 북한이 지난 달 중순 쿤밍에 식당과 전시설 등을 갖춘 '북중 문화협력교류센터'를 연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

#### 4. 이산가족

- 류길재 "이산가족 문제, 5년 내 못 풀면 답 없어"(연합뉴스, 2.27)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7일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된 '통일을 여는 의원모임'을 상대로 한 초청 강연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북녘 동포들의 인권 및 민생 증진과 향상을 하나의 세트로 해서, 앞으로 인도주의적 문제를 대북정책의 매우 중대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
  -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5년 이내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산가족 문제를 더는 해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
- 정부, 이산가족문제 논의 적십자 접촉제의 방침(연합뉴스, 2.27)
  -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조만간 북한에 제의할 방침이라며 "우리가 (먼저) 제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
  - 정부는 차기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면 추가 상봉과 상봉 정례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계획
  -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 포괄적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 통일부 "北미사일 발사, 남북관계 영향 없어야"(연합뉴스, 2.28)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이산가족 추가 상봉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이산가족 추가 상봉을 위한 접촉에 대해 "현재 적십자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적십자 실무접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



- **朴대통령 "日과거부정 벗고 진실·화해 새역사 써야"(연합뉴스, 3.1)**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흩어진 가족을 만나게 더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제의, 北 호응 미지수(연합뉴스, 3.1)**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공식 제의함에 따라 남북 간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
  -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일관된 입장이지만, 이번 제의로 정부가 북한과의 추후 접촉에서 이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이란 전망
  -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심각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바탕을 둔 것

## 5. 납북자

- **일본 납치문제 의원연맹, 피해자 구출 총력 다짐(미국의 소리, 2.27)**
  -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 모임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의원연맹'이 26일 총회를 열고 성명 발표
  - 의원연맹은 북한이 국가 최고권력 수준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환영을 표명
  - 그러면서 보고서가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 납치 역시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북한에 권고한 점을 평가
  - 의원연맹은 일본인 납북자 모두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 담당상은 올해야말로 납치 문제에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노력을 촉구하고, 이번 유엔 보고서는 일본이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움직인 결과라며 이 보고서를 납치 문제 해결에 연계해 활용하겠다고 언급

##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 7. 대북지원

- **정부, 北에 구제역 방역퇴치 지원 제의(연합뉴스, 2.24)**



- 정부는 24일 북한에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퇴치 지원 의사를 전달하며 이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
  -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 구제역 확산 차단, 퇴치를 위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오전 북측에 지원 의사와 함께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며 "북측 반응을 봐 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 국가수의방역위원장 앞으로 발송
  - 정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접촉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는 여러 상황을 예상하지만 구체적으로 북측이 얘기하는 것을 토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선(先) 구제역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향후 정부의 대북 지원 확대 방침을 본격적으로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는 "그런 건(이산가족 상봉 행사) 전혀 개의치 않았고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응답
- 1090운동, 북 아기들 지원 ... 분유 2만6000통 어제 출발(중앙일보, 2.25)
- '1090 평화와 통일운동'이 24일 북한 영유아를 위한 조제분유 지원
  - 이번에 보낸 분유는 국내산 제품 2만 6000통(1통 850g, 3억4000만원 상당) 분량으로 1만 3000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규모
  - 분유는 선박편으로 이날 인천항을 출발한 지원물품은 중국 단둥항을 거쳐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 뒤 북한 각지에 지정기탁될 예정
  - 1090운동의 이영선 이사장은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진행으로 남북관계가 변화의 기회를 맞은 시점에서 북한 아기들에게 분유를 보내게 돼 기쁘다"며 "1090운동은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북한판 새마을운동' 적극 지원한다... 정부, 농축산업 교류 중점 추진(국민일보, 2.25)
-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농축산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남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함.
  - 정부 당국자는 24일 "남북 간 농축산업 교류가 계속되면 1970년대 우리의 새마을운동처럼 북한 농촌 지역에서 신작로 건설, 현대식 주택 개조 등 농촌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이 당국자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하게 되면 농촌 개량사업뿐 아니라 자연적으로 북한 농촌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등 부가적인 남북 교류협력도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임.
  - 북한판 새마을운동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대북지원



- 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식량비료 등 현물 직접 지원에서 기술과 의식개혁 보급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음.
- 정부는 북한판 새마을운동 지원을 위해 우선 남북 간 농축산업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인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북한 농촌의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들과의 접촉도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
  - 피부에 와 닿는 북한판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킨다는 구상
  - 통일부도 지난 6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정부는 우선 올해 중으로 국제기구 및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종자농기구 등 온살농축산 자재 지원을 시작, 북한판 새마을운동 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영농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 **연천군 묘목 대북 지원...1만3천㎡ 양묘장 조성 추진(연합뉴스, 2.26)**
- 경기도 연천군은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대규모 양묘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 연천군은 오는 3월 중 대상 부지를 확정, 1만3천223㎡(4천평) 규모의 대북지원형 묘목 증식원을 조성하고, 4월에는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할 방침
  - 북한 산림 황폐화로 접경지역에 예상되는 자연재해를 조기에 막고 비무장지대(DMZ)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
  - 또 북한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안정적으로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음.
  - 연천군 전략사업실 관계자는 "DMZ 세계평화공원 제안 등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통일부 "구제역 지원 관련 北반응 아직 없어"(데일리NK, 2.26)**
- 북한 구제역 방역퇴치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접촉 제안에 대해 북측의 답변이 없는 가운데,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북측의 반응을 보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
  - 김 대변인은 "백신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구제역 방역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의 구제역 방역 관련한 실무접



축 제의에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내부 검토를 해서 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실무접촉 제의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으로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

● WFP "대북사업에 320만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2.27)

- 세계식량계획은 모금 부진으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지원 사업에 320만 달러의 본부 기금을 긴급 지원
-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 있는 식품가공 공장 3분의 1이 가동 중단 상태인 세계식량계획이 대북지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본부 기금 320만 달러를 긴급 투입
- 지난해 지원했던 780만 달러를 포함하면 북한 사업에 투입된 세계식량계획의 내부 기금은 모두 1천1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간의 총 모금 2천 560만 달러의 43%
- 나나 스카우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지난해 지원 규모가 1996년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 최소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모금이 지원 사업 예산의 10% 미만에 머물러 본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
- 세계식량계획 본부의 기금은 국제사회의 정부나 기업, 개인이 특정 나라를 지정하지 않고 기탁한 기금으로 모금이 부진한 나라를 돕는 데 쓰임.
-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6월 말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240만 명에 영양 강화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약 2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27일 현재 모금은 13% 수준인 약 2천560만 달러에 불과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북 자금 절반 WFP 지원(미국의 소리, 2.27)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CERF)이 대북지원자금 분배 내역을 공개했는데,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에 달함.
- CERF은 북한에 대한 '자금부족 긴급 지원금(CERF Underfunded emergency window)' 명목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3백25만 달러를 배정
-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지난 달 북한 내 유엔 기구들에 배정한 '자금부족 지원금' 6백5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평양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이 25일 VOA'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지원은 이 기구의 올해 대북 사업 예산 1억9천9백만 달러의 1.6%에 불과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3백25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해도 2월 말 5개 영양과자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에서 영양과자 공장을 가동하려면 적어도 8백3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3백25만 달러는 현재 대북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엔 기구들에 배정
  - 유엔아동기금(UNICEF)에 1백만 달러를 배정해 영양을 지원하고 식수와 보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1백만 달러는 유엔아동기금이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산정한 2천30만 달러의 4.9%에 해당
  - 또한 식량농업기구(FAO)에 1백만 달러를 배정해 곡물 생산을 증대하고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이도록 했으며, 세계보건기구에 1백만 달러가 배정, 유엔인구기금에는 25만 달러가 배정돼 신생아와 산모를 지원토록 함.
- **정부, 1억9천만원 상당 영양가루 대북지원 승인(연합뉴스, 2.27)**
    - 통일부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섬김'의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했으며, 섬김은 1억9천만 원 상당의 어린이 영양식 제조용 가루를 북한 라선지역 유치원과 소학교 등에 보낼 계획
    - 정부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선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심사, 허가해주고 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에 대해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 현재 영유아용 영양식과 의약품 등에 국한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8. 북한동향

- 남북 이산가족상봉(2.20-22, 금강산) 북측 상봉자들(양상환·유기정·곽운성)은 인터뷰에서 '남북분단과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2.23, 노동신문/상봉장에서 올라나온 눈물에 젖은 목소리)
- 北, 옥류아동병원과 전국 소아병원들을 연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새로 수립(2.24, 중앙방송)
- 日 수상 '아베'의 야스구니신사 참배를 비호 두둔하는 정객들의 발언 관련 '일본의 고위 정객들의 잡소리는 국제사회의 우렁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조언(2.24, 중앙통신/침략 역사를 반성할 의지가 있는가)
  - \* 日부수상 '아소': 국회에서 "국가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 \* 내각관방 참여 '혼다': 美 보도진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수상이 참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 北,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며 '외세에 의해 빚어진 민족분열로 기나



긴 세월 헤어져 있던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서로 얼싸안고 안부도 전하면서 혈육의 정을 뜨겁게 나누었다고 이산가족 상봉 종료 보도(2.25, 중앙방송·중앙통신)

-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작별하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복락을 함께 누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산가족 상봉을 출발점으로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화해와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의 요구'라며 '오늘의 성과로 남과 북 사이에 마련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2.25, 평양방송·노동신문/관계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행사)

●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휘방책동(北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는 일시적 유회책 등으로 비방중상)' 지속 비난과 "미국의 간섭책동을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반외세 배격투쟁' 강조(2.26, 평양방송/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고약한 심보)

● 北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2.27, 중앙방송평양방송)

- 국정원의 지시를 받으며 반공화국 정탐행위와 종교행위를 하였고, 탈북자들을 월남 시키는 행위와 지하교회에 끌어들인 북쪽 사람들을 사상과 정신적으로 타락시킨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 또한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는 '남북 사이의 화해 분위기가 돌고 있는 시점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

● 日 외무성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유포한 것 관련 '역사주의 원칙과 학술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강도적 논리'라며 '영토팽창 야망 실현의 선행공정'이라고 비난(2.27, 평양방송/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